

“호남 대통합으로 대부흥 시대 열 것”

백승재 진보당 군산지역위원장,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퍼지컬 AI 산업벨트 구축 등 3대 전략 제시

민중노총 서비스연맹 전라지역본부장이자 진보당 군산지역 위원장인 백승재 후보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호남대통합’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백 후보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립과 침체에 빠진 전북을 대전환시켜 대부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회 위원장과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오은기 순창군수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해 세 걸음을 과시했다.

그는 현재 전북 상황을 “서민경제 붕괴와 청년 유출, 농민·노동자의 생존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총체적 위기”로 진단하며 기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북이 초광역 경제권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며, 광주·전남과 충청권의 통합 논의와 달리 전북은 전략 부재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호남대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전략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퍼지컬 AI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분산시키고 새산업과 전주를 잇는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노총 서비스연맹 전라지역본부장이자 진보당 군산지역 위원장인 백승재 후보(사진 가운데)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둘째, 농업을 국가 생존 기반으로 규정하며 농민 기본소득 강화와 농업 관련 핵심 공공기관 유지를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조성을 제시했다.

셋째, 백제·조선 역사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K-컬처 문화역사도시’ 육성을 통해 전북을 ‘세계적 역사 문화 고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장기 집권 구조를 비판하며 진보와 민주 세력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12.3 내란 정국의 중대한 시련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백 후보는 자신의 이력도 강조했다. 그는 “정리해고 현장에서 구국을 감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왔으며 농민들과 현장에서 삶을 나누었다”며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바꿀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눈물과 분노를 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치

로 전북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선거는 과거의 정체를 선택할 것인지, 미래의 진보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는 창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진보당 백승재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전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군과 국민의힘 김광종 후보 등의 다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 명시

민중 이원택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개정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1894년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북공무력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성격이 분명한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그 정신이 처음으로 태동했던 곳”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의 뿌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894년 일제의 경북공점령으로 시작된 국권침탈 과정 속에서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한 항일 무장투쟁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운동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수정”

민중, 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관련 당정청 후속 합의안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공소청법상 영장 집행·영장 청구 지휘권 등 삭제 수사개시 통보 의무 등 명시 중수청법 45조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후속 합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등 수사 지휘·개입 여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사진)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유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

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한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디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제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 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 협의회에 대해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삭제 △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검찰총장 직무유임·이전·승

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등으로 설명했다. 또 법안 시행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해 6대 범죄에 대한 법령을 촘촘히 만들었다”고 했다. 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5조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추가 발언을 자제해 “중수청의 6대 범죄 조항을 하나하나 법조항으로 구체화했고, 법외폭력을 하나 더 추가했다”며 “가장 지적이 많은 중수청법 45조를 전부 삭제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소멸 고위험 지역 임실, 기본사회로 농촌 공동체 대전환”

한득수 임실군수 출마 공식화

한득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지자 50여명과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예정자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임실을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로 대전환하겠다”며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 예정자는 임실이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이는 복지, 주거, 교통, 의료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핵심 공약으로는 먼저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햇빛연금’ 도입을 통해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영체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득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고령자와 청년,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을 육성해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예산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16~18% 수

준인 농업 예산을 25%까지 확대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산지유통센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 직매장을 설치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365 농정을 통해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구조로 전환하고, 산지 자원화 사업과 자원순환 농업법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분야에서는 ‘원스톱 민원 인허가실’을 구축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약화를 막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는 심민 현 군수의 3선 제한으로 인해 한득수 후보 외에도 김병이·김진명·성승후·한병락 후보 등이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경선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만호기자·임실=진홍영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65세 이상 시민 개념 도입... 주체적 삶 지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65세 이상 시민을 위한 보편적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17일 65세 이상 시민 책임공약을 통해 전주시 전체 인구의 약 19%에 해당하는 12만 명의 고령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과 ‘돌봄’을 전주시가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보편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모든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노인’ 중심의 정책 접근에서 벗어나 ‘65세 이상 시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찾아 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D)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AI 기반 스마트 시니어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문화예술 도슨트 등 공공·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됐다.

이만호 기자

김광종 전 아리랑당 대표, 국힘 도지사 후보 신청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아리랑당 대표였던 김광종 씨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김 후보는 국민 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난 11일 단독 신청자로 면접을 보았다고 밝히며 공천 확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4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그는 당초 국민의

힘 측으로부터 전주를 당협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전북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들로부터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당 내부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설 인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마를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관원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은 같은 날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함께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라남·북도에서는 자신이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지역구 쪼개기’ 규탄 피켓 시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거대 양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규탄하며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정치개혁 피켓시위’ 시위를 열고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고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기득권 유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국회 앞 농성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정치개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

혁신당 도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심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김제·부안 등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귀책 사유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